

발제2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공과작사 **대한민국!**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도시의 지역산업진흥방안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황 태 규(우석대학교)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도시의 지역산업진흥방안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황 태 규(우석대학교)

〈목차〉

- I. 들어가는 글
- II. 혁신도시 성과와 가치
- III. 혁신도시 산학협력 실태와 성과
- IV. 혁신도시 공공자원의 산업화 방안 도출
- V.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산업진흥방안
- VI. 결론 및 제언

I 들어가는 글

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시키는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대학과의 산학협력 부분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산업자원으로 보고 이를 지역산업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산학협력이란 무엇인가, 공공자원을 어떻게 지역특화 산업화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산업화 적용방안을 살펴보았다.

현재까지의 관련연구는 주로 혁신도시 조성단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에 관련된 자료와 지역에서의 관점을 적용한

발전방안에 관한 지역연구원의 보고서 문헌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노무현 재단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2.0’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혁신도시의 일반적인 성과에 관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2016년 2월 국회의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혁신도시관련 보고서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등의 각각의 자료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의 혁신도시의 성과, 그리고 그 중 산학협력에 대한 성과에 관련된 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산학협력의 성과가 부족한 점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의 실천 방안으로 제도적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혁신도시 성과와 가치

1. 혁신도시의 성과

혁신도시가 추진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115개 이전기관 중 110개가 이전하였고 지역별로 편차는 있으나, 이전기간이 오래된 곳은 3년을 넘었다. 그래서 혁신도시 이전효과는 인구증가, 지방세수입증가, 지역인재 취업률 증가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전과 동시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공공기관 직원 이전율은 초 년도에 비해 높아지긴 했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전국에 지점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수도권에 지점이 밀집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직원 수 대비 이전율은 의미가 없는 수치라 할 수 있어, 현재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 인구이전효과로서는 가치가 있으나 합리적인 지표로 관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혁신도시의 인구증가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총 271000명 계획에서 104046명이 이전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13년 53,492백만 원에서 15년 12월 기준 744,210백만원으로 증가했다. 광역시도 소재 지방대학 졸업자의 채용율은 13.3%로 당초 8,073명 채용 계획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추세다.

〈표 1〉 혁신도시 인구증가

(‘15.12월말 기준, 명)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계획	271,000	7,000	22,000	50,000	20,000	31,000	42,000	29,000	27,000	38,000	5,000
12월	104,046	7,795	5,922	12,452	17,270	10,337	8,200	21,056	9,234	9,848	1,932
비율	38%	111%	27%	25%	86%	33%	20%	73%	34%	26%	24%

〈표 2〉 지방세 수입증가

(‘15.12월말 기준, 백만원)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13년	53,492	14,068	7,545	1,951	3,511	4,152	2,015	7,518	6,282	5,659	791
’14년	212,762	18,238	21,999	36,032	22,979	14,772	9,686	50,073	14,228	22,341	2,414
’15년	744,210	405,583	38,415	85,061	23,343	49,285	25,071	29,813	31,912	47,231	8,497

〈표 3〉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15.1월~12월 채용인원, 명)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전체	8,073	345	419	1,959	295	1,549	261	512	1,970	724	39
지역	1,069	93	69	302	29	142	31	75	192	132	4
비율	13.3%	27%	16.5%	15.4%	9.8%	9.2%	11.9%	14.6%	9.7%	18.2%	10.3%

* 지역인재란 이전공공기관이 위치한 광역시·도 소재 지방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말함

2. 혁신도시의 핵심가치

혁신도시의 핵심가치는 단순히 인구증가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머물러 있지 않다. 실질적 가치는 공공기관과 지역 내 혁신산업을 만들어 지역경제의 핵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혁신도시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업유치 등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혁신도시의 핵심가치로 우선 공공기관관련 자원 활용 지역특화산업화가 있다. 혁신도시의 핵심가치는 인구 증가에 있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 인구 증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활성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가치는 바로 공공기관의 핵심산업가치를 중심으로 지역내 혁신산업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밀도 있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핵을 만드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도시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업유치 등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특화산업 인재양성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특화산업에 맞는 인재를 지역 내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양성하는 일이다.

셋째, 특화산업 연구개발투자다. 혁신도시 공공자원을 활용한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바로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러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지역내 대학의 연구자원과 혁신도시의 연구자원과의 결합이 중요한 일이다

넷째, 특화산업산업관련 기업 창업 및 유치다. 혁신도시의 공공자원을 활용한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한편 관련 기업들이 창업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II 혁신도시 산학협력 현재와 성과

1. 혁신도시와 산학협력 현재

첫째, 현재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주요업무에 있어 지역산업진흥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없다.⁶⁾ 공공기관의 설립은 대부분 관련 모법에 의해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이전지원단을 설치하여 이전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혁신도시의 건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지원단을 유지하면서 지역과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목적에 ‘지역산업진흥’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조직설치의 명확한 기준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예산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명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구체

6) 예를 들면 전기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전북혁신도시의 전기안전공사가 설립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어디에도 지역산업진흥과 관련된 사업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실천이 어렵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산업진흥 협력경험이 없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의 일부를 떼어내 수도권지역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의 지사를 통할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 공공기관이 지역과 협력하는 일은 낯선 일이다.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차원의 음악회 등은 존재했으나, 구체적으로 지역의 대학 등 산업협력 대상들과 협력해본 경험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산(産)이라기보다 관(官)에 가까운 조직이다.** 공기업은 사실 ‘산’이라기 보다 ‘관’에 가까운 조직이다. 공기업은 상당부분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범위 내의 특정사업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즉 공공기관은 주로 사업개발이나 연구개발보다는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리고 사업관리를 위한 운영조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공무원들보다 더 관료화된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공무원조직은 주민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역동적인 조직운영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공공기관 자체가 산학협력의 주체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학협력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관료적 운영형태가 이러한 협력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넷째, **중앙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기업은 사실 공무원보다 입사가 어려운 조직이다. 안정성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비슷하고 보수 면에서는 공무원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기존의 서울중심, 수도권중심의 인식을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기관이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의 협력 즉, 우리는 중앙기관이라 특정 지역, 특정대학과 협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은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혁신도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공공기관 이전가치에 집중되어 있다. 당장 지역경제에 필요한 단순한 공간이전 효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건설사업과 소요물품 구매에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공공기관이 지역출신을 얼마나 채용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전북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출신 공공기관 채용률을 35%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언론의 문제도 있다. 살펴보면 지역 내에서 새로운 여론형성의 주역인 지역 언론을 보면 지역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산 3,000억 원의 내외의 작은 지자체에는 전문주재기자가 있으나, 예산 1조5천억의 한국의 농생명산업생태계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에는 관련

전문기자나 부서가 없다. 그래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관련기관의 기사보다 작은 지자체의 행사기사가 크게 난다.

2. 혁신도시의 산학협력 성과

혁신도시 산업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산학협력성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만드는 기능 즉, 특화교육을 통한 특화인재양성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의 사업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특화연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교육부문

일부대학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학원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학에서는 전문학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혁신도시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였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표 4〉 교육부문 혁신도시 산학협력 실태

구분	교양/전공	과목명/전공명	교육기관
고교			해당없음
학부과정	교양	혁신도시와 청년도전정신	우석대
	전공	에너지공학부	동신대
대학원과정	전공	에너지MBA	전남대/경상대
전문과정	전문가과정	발전산업전문가과정	경상대

2) 연구부문

연구부문은 아직까지 거의 성과가 없는 분야이다. 2016년 2월에 발표된 국회 혁신도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는 대학과의 일반적인 MOU형태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연구성과는 아직 나타난 곳이 없다. 특히 혁신도시관련 연구소가 별도로 설치되었다는 내용도 없다. 이 부분은 향후 확실한 개선이 있어야 지역산업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맞춤형 신규 인적자원 조달의 모범사례

〈동신대 에너지융합학부〉 : 95%수시 선발, 적성중심 선택	
선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방법 : 95%수시로 선발하여 적성중심으로 아이들 선택 • 선발특혜 : 장학생선발(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및 생활비 지원)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학습 : 관련 기업에서 현장실습의 의무화 • 융복합학습 : 단순 전공과목외에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융복합과목을 수강하도록 의무화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 교수 채용 시 특례 : 박사과정을 마치고 당 대학교에 교수로 채용이 우대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기존 인적자원의 능력향상 • 경상대 및 전남대의 에너지관련 대학원과정 개설

IV 혁신도시 공공자원의 산업화 방안 도출

1. 산학협력 개선방안

1) 공기업개선방안

공기업 개선방안으로 ‘지역특화산업진흥부문’ 조직 내 체계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는 정관 등 설립목적에 지역특화산업진흥 부문을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관련 부서 가칭 ‘지역산업진흥부’를 설치하는 것이고, 셋째는 부서인력을 확충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평가제도인 공공기관평가분야에 지역산업과 관련된 가칭 ‘지역산업진흥지표’ 부문을 신설하여 향후 공공기관평가 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2) 대학개선방안

지역대학은 혁신도시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첫째,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제공할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교 및 대학에서는 전공 및 전문학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양과목을 만들어 공기관의 역할을 지역 내에서 환기할 필요도 있다. 이외에도 전문대학원 및

관련 산업전문가들을 위한 전문가 과정보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대학 내 R&D체계(전문연구소 등)를 구축해야 한다.

3) 자치단체개선방안

혁신도시 산업진흥 지원국 신설해야 한다. 현재 자치단체는 혁신도시조성 및 건설지원단 형태인 ‘혁신도시지원단’에서 빠른 시간 내에 지역산업진흥중심의 ‘혁신도시산업진흥지원국’으로 변환해야 한다.

4) 지방의회개선방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련 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지방의회도 혁신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를 혁신도시 산업진흥지원조례로 바꾸고, 이러한 조례에 기초하여 가칭 ‘혁신도시 산업진흥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혁신도시의 산업진흥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지방의회에서도 운영하여야 한다.

5) 지역시민사회개선방안

혁신도시산업화포럼 등 지역 시민사회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혁신도시와 관련된 시민단체는 거의 없다. 혁신도시가 빠른 시간 내에 지역 내 산업으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산업화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설립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지원제도가 필수적이다.

6) 지역 언론의 변화방안

지역 언론도 지역 내 혁신도시산업화에 관한 이슈를 소통해야 한다. 혁신도시 산업화이슈를 지역 내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실 언론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신문은 빠른 시간 내에 ‘혁신도시 산업부’를 신설하여 지역 내 혁신도시의 산업뉴스를 지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1) 추진주체 재구성 : 산업중심 추진단으로 재구성

전국의 혁신도시의 공공자원이 지역산업으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구성과 이전중심으로 되어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산업중심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2) 관련법 개정 및 제정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등 현재의 공간조성에서 산업진흥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신설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3) 개정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전반에 대한 특별법으로 혁신도시 관련 부분은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혁신도시공공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진흥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만약 개정을 한다면 혁신도시 공공자원을 통한 지역산업진흥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공공기관이전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주로 공공기관 조성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공간개념으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등의 산학협력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은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산업진흥과 혁신도시와의 관계와 구체적인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인적자원개발, R&D, 기업창업 및 유치지원 등의 구체적 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은 주로 공공기관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현재 이 법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다. 만약 개정한다면, 이전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에 지역산업진흥을 각각의 공공기관에 추가하도록 하고, 이러한 지역

산업진흥을 위한 부서 설치 그리고 관련 인원과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와 마지막으로 산업 진흥성과에 대한 평가부분도 마련해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주로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혁신도시 관련 산학협력에 있어 관련성이 크다. 만약 개정하다면 지역 대학의 주요 산학협력의 내용으로 혁신도시공공기관과의 산학협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개정되어야 한다.

〈표 6〉 관련법 개정방향

개정	균형발전특별법	•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지역특화산업 주체로 명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혁신도시법)	• 공간조성정책에서 산업진흥정책으로 전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목적에 ‘지역산업진흥’ 추가 • 지역산업진흥업무관련 지원방안 명시 •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 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지방대 산학협력의 주요 부문으로 혁신도시 공공 자원 특화산업화 부분 추가 *별도의 특성화사업 실시 등

4) 관련법 제정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산업진흥을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관련 법률 개정 외에 별도로 가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특화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좀 더 효율적으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되는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산업진흥에 있어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둘째, 특별법의 실행주체로 산업관련 부처를 명시하고, 관련 부서 “혁신도시 공공자원 지역산업화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하하고 셋째, 산업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으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을 명시하고, 넷째, 각 기관 및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을 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표 7〉 관련법 신설방향: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특화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분	관련법명	주요내용
제정	가칭 “혁신도시 공공자원의 지역 특화산업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산업진흥 주제 명시 • 혁신도시 공공자원 지역산업화추진단 • 산업진흥을 위한 지원대상 • 대학 : 교육/연구 • 공공기관 : 조직/업무 • 기업 : 유치/연구 • 단체 : 연구회, 언론, 시민단체 등 • 산업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

V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산업진흥방안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들의 산업적 부분을 특화하여 지역의 새로운 산업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곧 이전할 식품연구원을 제외한 11개 기관이 이미 이전했다.

혁신도시는 단순히 도시개발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산업적 가치다. 예를 들어 농생명 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전북에 농생명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식품연구원과 함께 식품산업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6조원이 넘는 공간정보산업을 키워야 하며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조선 최고의 출판단지였던 완판본의 전주를 출판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하고,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전기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전기안전장치와 기구에 대한 산업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한국 최고의 자산보유기관인 연금관리공단과 함께 금융산업 활성화도 시작할 수 있고, 또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의 교육전문기관이 지방행정연수원과 단순히 한국지방공무원의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지방공무원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공공부문의 교육의 메카도 고민해야 한다.

혁신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나 다 하는 공상적인 첨단산업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역자원을 통한 산업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즉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를 통해서 지역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의 시대가 왔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의존하는 지역이 아니라, 혁신도시와 연계된 자신만의 새로운 산업자원을 개발하여 당당하게 지역산업으로 진흥시켜야할 책무가 지역에 부여된 것이다.

1. 전북지역 공공자원을 활용한 지역 내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상

우리에게 기적처럼 주어진 자원이 있다.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다. 전국을 각 지역 중심의 다핵구조로 만들려 했던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이 지역에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앞으로의 지역산업발전의 핵심은 바로 혁신도시의 자원을 지역산업화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산업화할 수 있는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농식품산업군이다.

1) 농식품산업생태계 조성

농촌진흥청은 그야말로 농업기술에서부터 농기계, 사료는 물론 식품산업에 이르기까지 농식품산업생태계를 만드는 종합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농진청의 이전으로 전북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농생명연구단지'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인력도 1,200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종합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산업군'을 지역에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식품연구원 이전 계획이 완료되면 그야말로 전북은 아시아농식품산업생태계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2) 전기안전산업생태계

전기안전공사는 내려오자마자 주민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친화력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전남광주 혁신도시 나주에 동지를 틀어 전력산업과 관련된 가장 큰 산업적 가치는 전남이 가지고 있겠지만, 전기안전부문에 있어서는 전북에서 산업적 틀을 충분히 구상할 수 있다. 어차피 전기안전과 관련된 인재를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산업군도 미래산업의 하나로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전기안전기술을 수출하고 있어 이 부분에 지역과 함께 집중하면 지역 내 산업증진은 물론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공공교육산업 생태계

완주군 이서면 지역에는 넓은 부지에 지방행정연수원이 들어서 있다. 연수원에서 가장 매력적인 프로그램은 바로 해외공무원 국내연수다. 수 십 국가의 공무원들이 연수원을 거쳐 갔고, 각 국에서 고급간부로 활동 중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공무원들 끼리 동창회까지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한다.

먼저 이들 해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홈케밍데이를 해보면 어떨까? 홈케밍데이 기간 중에는 각국의 사례를 모은 ‘국제공공정책학술세미나’를 겸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외공무원연수를 특화해서 해외공무원 전용연수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한국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은 중국공무원 전용 해외연수원을 기획해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의정연수원이라는 자체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연수원과 전북이 힘을 합치면 한국지방의정연수원도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면 의정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의 상당부분 지방행정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어서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지방공무원교육의 메카, 지방자치의원들의 교육의 메카를 전북이 맡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4) 아시아 농식품교육산업생태계

농촌진흥청외에 한국농수산대학도 혁신도시에 등지를 틀었다. 국가농수산업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는 농수산대학은 농도인 전북에서 제2의 성장과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부의 핵심농정방향이 ‘전문인력양성’이고, 전북도 보람 찾는 농민·제값 받는 농업·사람 찾는 농촌을 일컫는 삼각농정을 펴고 있는 때라서 농수산대학의 전북 이전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북에는 이미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인 연수원, 농식품사관학교 등 다양한 농업관련 기관이 들어와 있다. 이제 한국농수산대학이 들어옴으로써 농진청을 중심으로한 농업분야 클러스터의 완성과 함께 국내 최고의 농업교육장이 되었다.

현대농업은 과학영농이며, 농민도 이제 농업경영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첨단시설과 체계적인 직업교육시스템을 갖춘 농업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역대학의 농식품관련 학과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이다.

한국 농어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후계자들은 전북의 소중한 이다. 이들과 함께 전북을 농식품교육의 메카로 만들어, 아시아농식품수도로 향하는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5) 연기금 중심 금융산업생태계

전북은 혁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크나큰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었다. 전북이전 대상 공공기관중 한국토지공사가 경남지역 이전 예정기관인 한국주택공사와 합병을 하게되어 한국토지공사의 이전에 혼선에 생긴 것이다. 당시 전북에서는 계속해서 합병된 기관을 분산배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쉽게도 합병된 LH공사는 주택공사의 이전예정지인 진주혁신도시로 배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미안한 마음에 진주혁신도시 예정기관의 하나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에 배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생겼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여의도에 남기겠다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일단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전작업을 준비중에 있으나 언제든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전제로 전북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연기금투자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기반으로 전북에서는 금융타운조성 등 지역에 금융산업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6) 출판문화산업생태계

전북에는 가장 의미 있는 공공기관이 등지를 틀었다. 바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다. 언젠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대표가 TV대담프로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전주는 예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인문지향이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예술이 발달한 지역이 아니라 출판 인쇄 등 그야말로 인문학의 토대가 되는 산업과 문화를 가꾼 곳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전주에서 인쇄된 소설 완판본은 유일하게 서울에서 인쇄된 소설인 경판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임진왜란때는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안의 손홍록선비를 배출한 곳이고, 문화의 상징인 종이인 한지의 고장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특히 최근에 대한민국 유일의 책박물관이 완주에 들어섰고 책마을 센터라 하여 고서점 헌책방이 들어서는 공간이 완성을 기다리고 있어, 이러한 서점과 출판문화 등이 어울어져 한국의 새로운 출판문화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대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일들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전북은 음식과 식품문화로 특화하여 전북에서 음식과 식품에 관한 출판을 지원하는 제도를 먼저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산업자원간의 결합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공간정보산업생태계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스마트사회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스마트사회를 구현하는 핵심요소는 공간정보서비스다. 따라서 세계 공간정보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시장경쟁이 치열한 산업분야이다.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에 관한 정보(위치정보 외에도 유무선통신기술, 시설물원격관리, 지하자원추적정보, 공간디자인정보 등)를 생산·관리·유통하는 산업이다.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상상 이상의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주는 미래첨단산업이다. 일부국가에서는 다양한 공간정보와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범죄예방시스템, 재해예방시스템을 가동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산업화를 핵심사업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오자마자 전북을 세계최고의 공간정보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제1회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우리의 공간정보산업이 국내를 넘어서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물론 지역과의 상생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미 작지만 의미 있는 지역과의 협업을 시작했다. ‘공간정보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과 ‘3D콘텐츠산업육성 및 3D시장 활성화사업’에 전북도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는 미래산업지도를 다시 그려야할 필요가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천편일률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산업은 경쟁력이 없다. 특히 우리지역은 관련 기업이 부족할뿐더러 인적 자원 기반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지원금만 축내는 신산업은 정리되어야 한다. 마침 한국 국토정보공사 이전으로 밀접한 지역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니, 공간정보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택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2. 전북지역 지역대학의 변화

전북지역 지역대학의 변화를 위해선 지역에 맞는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20세기의 산업의 중심, 서울과 수도권의 일자리 감소속도가 더 빠르다. 가장 빠르게 일자리 감소가 진행되는 부분이 바로 금융과 제조부문이다. 어쩌면 우리지역의 경우, 다행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내 새로운 서비스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혁신도시가 새로운 산업자원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 자원들의 증가로 그나마 타 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일자리 감소는 적은 편이다.

특히 20세기 전통적인 일자리의 감소로 그간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공급했던 수도권은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지역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산업도시라는 신기루는 의미가 없다. 최근 인구유출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영남지역의 인구유출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나와 있다. 조선, 철강, 정유산업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으니 그동안 1인당 소득액이 가장 많아 우리가 부러워했던 산업도시 울산의 신화도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이미 수도권도 인구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지역이 되었다. 지역을 떠나고 싶어도 예전과 같이 수도권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취업을 해야 한다. 일자리를 지역과 대학이 책임져야 하는 요구가 어느 시대보다 강해졌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대학은 서둘러 특화산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북의 대학들은 대부분 수도권의 서비스산업과 영남의 공업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 구조에서 탈피해 독립적으로 전북만의 특별한 인재를 양성하는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인적자원양성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하려면 대학혁신이 필요하다. 지역 내 전통문화와 결합한 음식은 아주 중요한 테마로서, 음식문화관광과 관련된 특화산업을 모색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과와 교과목 등 학교 전체운영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1) 교양부문의 특화

우리지역 대학에 지역의 새로운 산업자원인 혁신도시에 관한 교양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전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소개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해, 각 공공기관별 산업적 이해에 관한 과목 등이 있으며, 예를 들어 전기안전공사와 관련된 전기안전 과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학년에는 전체공공기관의 이해, 2학년에는 각 기관별 과목의 개설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런 과목들을 교양과목으로 특화해서 전북지역에 맞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지역특화 교양학점 이수제’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중심을 둔 학과개편

전기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에 관심을 둔다면 전기공학과 등 전기관련 학과는 과감하게 ‘전기안전학과’로 변신할 수도 있고, 전기안전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전기공학과로 특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도시의 중심산업인 농식품산업을 염두에 둔다면, 음식과 식품에 대해서 지역대학의 학과에 접목해 봐야 한다. 먼저 일반학과를 우리지역에 맞게 특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의 경우, 식품산업경영으로 특화하여 인재를 차별화되게 양성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영학과와는 다른 식품기업전문경영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식품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인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관광학과의 경우는 음식관광분야로 특화하거나 전통문화관광, 중국문화관광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교육과 서비스 부문을 강조한 커리큘럼으로 문화관광서비스를 최고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공학과와 경우도 식품전문기계 부문을 첨가하여 특화교육을 실행할 수 도 있다. 전자공학과는 식품관련 가전제품인 냉장고, 전기밥솥 등 식품중심의 전자제품에 집중된 특화전공을 만들어 <식품전자공학>이라는 새로운 전공분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농식품학과군을 현재의 학과보다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농업과 관련된 화두는 6차산업화이다. 이러한 산업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농경제학과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농산업학과, 농식품경영학과, 아니면 농촌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전국 최초로 6차산업학과 등을 새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농식품관련 대학원과정의 다양한 학과의 개설과 변화 등이 특히 융복합과목의 개설이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은 앞으로 줄어드는 고교학생들의 입학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생명연장에 따라 커져가는 재교육시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식품MBA, 전기안전산업 MBA과정, 6차산업MBA과정, 음식관광MBA과정 등은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다.

물론 대학에서 새로운 분야의 교육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부분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전문가가 있으므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합하여 추진하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역의 현장과 학문과의 실용학문 생태계로 식품문화사, 식품화학, 요리기구 식기산업론 다양한 전문분야를 새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지역 내의 대학이 연합하여 새로운 산업교육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중심을 둔 동아리

혁신도시와 관련된 과목개설과 특화전공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학생들이 이런 학문과 관련 문화를 평소에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수시로 학교생활을 통해 진로를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관련 학과는 전기안전동아리를 만들어 현재 전기안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등 해외기술전이사업 등을 해외사업에 해외 봉사자로 동참하면 아주 좋은 대학생활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국내 및 국외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혁신도시와 관련된 동아리가 참여하는 경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혁신도시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동아리의 경우는 대학 내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전문가도 공동지도교수로 임명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진로설계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4)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중심을 둔 연구조직 개편

지역대학과 혁신도시와의 연구협력의 경우, 국토정보공사의 공간정보연구원과 같이 최고의 연구기관이 함께 있는 경우는 현재의 연구원과 협업할 수 있는 연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연구기능을 갖추지 못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새롭게 관련 산업의 연구기능을 지역대학에서 신설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영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연구영역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은 공공기관 별로 협업에 의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의 농업생산연구영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간정보산업영역이 결합하고, 여기에 빅데이터가 결합하면, 농업생산예측정보보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농촌진흥청의 농기계IT 시스템과 완주지역의 트랙터 제조기업인 LS엠트론 그리고 국토정보공사의 공간정보시스템이 결합하면 인공지능형 농업기계의 생산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역대학의 연구기능과 공공기관의 연구 및 지역의 기계생산기능이 결합하면 지역 산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산업자원 가치를 높이는 작업 또한 우리지역의 몫이기 때문이다.

5) 산학협력 및 창업의 특화

산학협력에 집중하는 방법은 식품산업군과 혁신산업군으로 나누고, 초기에는 ‘혁신도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창업동아리와 창업교육에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관련 산업을 확대시켜나가고, 연구와 인적자원개발의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6) 혁신도시 지역체화의 완성

현재 지역에서는 35%지역인재 할당제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고민과 연구 없이 무턱대고 인원만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혁신도시를 지역에 체화시키기 위한 설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대학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된 과목은 물론 관련학과를 만들어 지역 인재교육을 시키고, 또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꿈을 심화시키는 한편 공공기관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개발해야한다.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공공기관의 비전에 특화된 인재들이므로 지역인재순환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지역인재순환체계가 완성되면 이제 전북의 대학은 공간정보에 관한, 전기안전에 대한, 식품산업에 대한 최고의 학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들 것이다. 그러면 지금 고민하는 학생들 유치문제 그리고 취업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의 혁신도시 관련 지역연구와 그 지원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와 관련된 '지역특화 산업 연구'에 대한 지역내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혁신도시관련 지역연구를 하는 교수들에게 연구결과물에 대한 가점제도를 통한 인센티브제도와 소액이라 하더라도 연구지원금 제도가 결합되어 지역대학교수 혁신도시 관련 지역연구지원이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학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대학 장학제도와 향토장학금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의 향토장학금은 대부분 서울지역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큰 인물이 되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을 떠난 학생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향토장학금의 경우 지역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므로, 지역특화산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학과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혁신장학제도'를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장학금", 연기금관련 최고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기금금융 산업진흥장학금"을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이외에도 식품과 음식관련학과는 지역 음식점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장학제도를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혁신도시 산업자원의 지역화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

전북도는 혁신도시로 인하여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대응방법은 소극적인 편이다. 혁신도시 이전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하는 등 의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등 아직은 작은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공공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 산업진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도청내에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을 가칭 “혁신도시 산업진흥국”으로 바꾸어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첫째, 적어도 국단위의 관련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서에는 ‘혁신산업진흥기획과’, 농식품산업지원과, 전기안전산업지원과, 공공교육지원과, 공간정보산업지원과, 산학협력지원과, 특화산업클러스터지원과 등의 다양한 지원과을 둘 수 있다.

둘째, 관련부서는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산학협력 자원들을 선도하여, 코디네이션해야 한다. 혁신도시 산업자원은 기존에 있었던 산업자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선도하여 지역 내 산업으로 안착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민간영역에서 협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각 혁신도시 공공기관별 후원회를 만들어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4. 혁신도시 공공자원의 지역특화산업화지원조례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공공자원을 전북지역내에 지역특화산업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조례의 구성은 첫째, 목적부문에는 혁신도시 공공산업자원을 지역에 체화하여 지역 내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둘째,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칭 ‘혁신산업진흥국’을 광역단체내 설치한다. 셋째, 혁신산업진흥국의 업무영역과 역할에 대해서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민간협력부분까지 조례내용에 담아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공공자원의 지역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혁신도시 건설 추진성과에서부터 산학협력 주요사례와 산학협력이 부진한 결정적인 사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부진사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하나의 예시로 전북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산업생태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 내 산업진흥을 위해서 전북도에서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해서 혁신도시의 성과를 지역체화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기술하였다.

혁신도시는 지역에 기적처럼 내려온 선물이다. 향후 지역발전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산업적 가치를 인식하고, 누가 먼저 지역특화산업으로 만드느냐가 지역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경쟁력 확보는 자원 자체가 지니는 개별적인 힘보다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원활하게 조성되게 하는 조례와 운영조직 등의 시스템인 것이다. 이제 지역은 독립적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스템경쟁에 돌입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이 될 것이다.